



2017.10



홈페이지: <http://iscenter.or.kr> 이메일: iscenter2015@gmail.com
주소: (150-300)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47길 2 2층
전화번호: 070-7631-0615

목차

% 세상을 바꾸는 시간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진실 [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6](#)

- 미주기구(OAS)와 미국의 공격에 맞서 베네수엘라 주권을 지켜야 한다

&"같이 한 걸음"

허울뿐인 '녹색혁명', 아프리카를 넘보다 [10](#)

' 변화의 물결'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정말 불공평하다고? [15](#)

("국제뉴스"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대테러 법안 [17](#)

[일본] 사상 첫 3연승으로 아베 총리가 던진 '대담한 다음 한 수'를 아는가? [20](#)

% 세상을 바꾸는 시간 %

편집장 노트: 이번 호에서는 베네수엘라 제헌의회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국내외 언론에서는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가 수립된 과정이 비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고 현재 베네수엘라 내에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매우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는 베네수엘라의 정세에 대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진실

f맨위로

글: 릴리안 헉스터¹ (교열팀, ISC)
원본: 마리아 빠예즈 빅토르², 에두 몬테산티³
번역: 심태은(The 숲 한글판 편집장, ISC)



(출처: 글로벌 리서치)

* 본 기사는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의 "The Role of Venezuela's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https://www.globalresearch.ca/the-role-of-venezuelas-national-constituent-assembly/5608680>)"를 요약 및 번역한 글입니다.

어떤 국가가 민중의 의지에 기반해 새 헌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이다. 이 제헌의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본 글은 마리아 빠예즈 빅토르 박사의 인터뷰를 요약한 것으로 베네수엘라의 현대 정치의 맥락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제헌의회의 성과가 안들 수 있는 데서 고취망적인 그림에 대해 설명한다.

¹ Lillian Hexter

² Maria Páez Victor, 베네수엘라계 캐나다인, 사회학자

³ Edu Montesanti

2016년 1월에 베네수엘라 보수야당인 국민연합회의(메싸 데 라 우니다드⁴, MUD)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MUD가 국회에 진출한 것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과 정부를 축출하기 위해서⁵”라고 선언했다. 행정권력에 대한 반대를 천명한 후, MUD는 대법원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세 명의 하원의원에 당선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보궐선거를 요구한 것에 불복했다. 이에 대법원은 세 하원의원의 당선 취소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했다. 국회는 마두로 대통령의 사임으로 맞대응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자 5월에 베네수엘라 헌법 347조를 발동해 제헌의회를 소집을 요구했다. 민중에게 권한을 주어 정치에 개입하고, 행정부 및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민중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기구에 최고 권력을 수여한 것이다. 야당은 외신을 활용해 제헌의회가 마두로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위한 수단이며 비민주적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헌의회가 대통령의 임기를 결정하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배치된다.

7월이 되자 제헌의회를 구성할 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장애인, 흑인, 청년, 노동자, 여성, 기업가 등 특수 부문을 대표하기 위해 스스로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민중에게 통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MUD는 제헌의회 선거를 보이콧했고, 선거 반대를 위한 무장 투쟁을 권장하기까지 했다.

제헌의회 반대측에서는 제헌의회가 국회를 해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헌의회는 정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헌의회가 단독으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제헌의회는 우선 미국 법무부와 협력해 폭력시위에 면죄부를 주고 지속될 수 있게 한 루이자 오르테가 디아즈⁶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다음으로 지난 18년 간 폭력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진실·화해·정의위원회를 건설했다.

제헌의회 이러한 민주적 성격에도, 주류 언론의 제헌의회 보도에서는 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해법에 대한 야당의 폭력적 저항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좌파 정치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행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니다. 주류 언론은 1999년에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베네수엘라를 오도해왔다. 차베스 대통령 사후, 그의 정치적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되어 독재자이자 전제군주로 묘사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차베스 정권과 마두로 정권 하에서 “원유로 거둬들인 수익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중략) 비애국적인 엘리트의 부패한 방식으로 (중략) 사용되지 않았다.” 1999년 이전, 베네수엘라는 영양실조, 문맹, 영아 사망과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급격하게 개선했고, 이는 “현대 역사상 그 어떤 국가도 단 10년만에

⁴ Mesa de la Unidad

⁵ <https://www.globalresearch.ca/the-role-of-venezuelas-national-constituent-assembly/5608680>

⁶ Luisa Ortega Diaz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없는”⁷ 수준의 성과였다.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에 대한 다른 국가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전 세계의 2/3에 해당하는 UN의 비동맹국이 베네수엘라를 지지했다. 또한, UN도 제헌의회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베네수엘라 헌법에 부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내 보수정부가 들어선 국가에서는 “베네수엘라 민주주의가 가진 참여적 성격, 즉 지난 19년 간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20여 차례의 선거에서 볼리바리안 노선이 18번 승리한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⁸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는 민중에게 권력을 되돌려주었을 때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하면서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예이다.

⁷ <https://www.globalresearch.ca/the-role-of-venezuelas-national-constituent-assembly/5608680>

⁸ <https://www.globalresearch.ca/the-role-of-venezuelas-national-constituent-assembly/5608680>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주기구(C5 G)와 미국의 공격에 맞서 베네수엘라 주권을 지켜야 한다’

f맨위로

글: 자넷 찰스(해외통신원, 미국)

번역: 황정은(ISC, 사무국장)



국제전략센터 해외통신원인 자넷 찰스⁹에 따르면 최근 안토니오 고르데로¹⁰ 주샌프란시스코 베네수엘라 영사와 풀뿌리 운동 단체가 가졌던 모임은 미국의 지속적인 공격과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반대 행동이다. A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이유는 볼리바리안 혁명이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성취한 것만이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지역 그리고 세계에 미국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는 다른 방식이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7월 초에 안토니오 고르데로 주 샌프란시스코 베네수엘라 볼리바리안 공화국 영사와 진행한 모임에 참석한 풀뿌리 운동 활동가가 말했다.

최근 몇 주 간, 미국의 공격과 더불어 베네수엘라 우파 야당이 볼리바리안 혁명을 상대로 한 사회 불안정 조장 행위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야당은 기업 언론과 OAS와 같은 역내 기구를 이용해 볼리바리안 혁명 정부와 풀뿌리 혁명 과정을 훼손했다. 지난 7월 30일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 8백만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해 헌법을 개정하고 경제 문제에서 야당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파시스트적인 구아림바¹¹ 폭력에 이르기까지 시급한 국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545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하면서 평화를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공격은 지속되었다. 지난 20년간의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서 야당은 자신의 이해에 따라 선거 결과를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정치 참여도 일관적이지 못했으며,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해 우려를 갖도록 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주장했다. 이러한 비난은 미국의 개입의 구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는 경제 제재, 여행 금지, 가볍게 “군사적 옵션”을 언급하는 것 등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며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⁹ Jeanette Charles

¹⁰ Antonio Cordero

¹¹ 구아림바(El Ura Vu)는 2017년에 일어난 반정부 폭력 시위로 참가자들이 길을 막고 바리케이트를 이용한 거점 확보 방식의 시위이다

현실을 고려해 베이 에어리어¹² 풀뿌리 운동 활동가들은 안또니오 꼬르데로 영사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과 공격을 분석하고 논의했다. 이 간담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평화, (베네수엘라의) 주권, 볼리바리안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전직 군인이자 공무원이었던 꼬르데로 영사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현재 자신들이 처한 시기, 위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공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인류의 주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탐욕과 이해로 국가 전체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꼬르데로 영사가 말했다. 그는 모든 국가는 자결권과 주권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약화시키며 사회 전체를 파괴하고 “비인도적인 상황”만을 남기고 있다. 꼬르데로 영사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들이 “한 사람의 번덕으로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꼬르데로 영사의 우려는 10월 13일에 루이스 알마그로¹³ OAS 사무총장이 베네수엘라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해외 대법원을 창설한 데서 기인한다. 알마그로 사무총장의 이러한 행보는 차베스주의, 통합사회주의당,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의 지지로 총 22개 주 중 18개 주에서 여당 후보가 주지사로 당선되었던 10월 15일 선거에 앞서 계획된 것이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에 대한 대중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켰고, 국제 여론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심을 측정하는 유일한 지표 역할을 해왔던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알마그로 사무총장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과 같은 OAS의 다른 회원국의 개입 시도가 실패하자, OAS의 정치적 규범에서 벗어난 이러한 행보(해외 대법원 창설)가 이어진 것이다. OAS가 쿠데타 정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 불법 선거를 인정하는 미국의 지배 하에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알마그로 사무총장과 야당의 행동은 위선적이다. 2002년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쿠데타, 2009년 온두라스의 쿠데타 및 선거, 1990년과 2004년 아이티에서 쿠데타와 부정선거를 지원한 것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기준이 드러난다. 꼬르데로 영사는 “야당은 미국의 지원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을 목도했다”고 밝혔다.

해외 대법원의 행동 범위가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런 책략은 야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정부(볼리바리안 혁명과 차베스주의 정부)를 실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외의 법적 수단을 만들어 개입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OAS와 미국이 무사히 망명정부를 세울 수 있게 된다면, 그들의 다음 수는 무엇이 될 것인가? 그들이 만든 대법원이 대변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과 정부에 맞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민중, 주권에 맞선 전쟁이 계속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국민 수백만 명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사안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연대를 위한 전략적인 행동에

¹² 6Um5fYU 샌프란시스코 내의 해안 지역

¹³ Luis Almagro

나서야 한다. 꼬르데로 영사는 여러 활동가들에게 “우리는 더 대담해져야 하고 이러한 위협에 맞서 행동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갈등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한 갈등은 베네수엘라 의 존재 자체 때문이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볼리바리안 혁명 과정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뿐만 아니라 정의, 평화, 참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실험이자 훌륭한 선례로 자리하고 있다. 사회주의, 평화, 역사적으로 억압받았던 민중과 과거 식민지 국가의 통합을 주장하는 베네수엘라의 대담한 행보는 미국의 패권, 세계 자본주의, 그리고 전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거 과정 외에도, 베네수엘라 정부는 분배 체계로 석유 산업의 부를 재분배한다. 석유 수출 재원으로 정부는 공동체평의회와 그를 통한 교문의 건설을 지원하며 사회 사업과 기본 서비스, 풀뿌리 운동을 통해서 베네수엘라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주민과 난민도 포함)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제에 대한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볼리바리안 혁명은 빠뜨로까리베¹⁴와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¹⁵, 최근에는 시트코(CITGO)¹⁶ 사가 허리케인 어마¹⁷로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 리코에 석유 5만 배럴을 기부한 것처럼 협동 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삶의 방식과 세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왔다. 베네수엘라의 리더십, 연대, 과업은 세계 경제와 권력의 중심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대다수는 평화적인 통합의 가치를 계속 지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야당과 미국, 그리고 다른 동맹국은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볼리바리안 정부를 합법적으로 전복시키기 위해 국제 메커니즘을 남용하는 것은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과 세계의 국가 주권과 국가 자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OAS의 해외 대법원이 가진 잠재적 영향을 모두가 알고 있으며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민중이 이에 대해 저항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대가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어디서 가장 큰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9월, 세계에서 수백 명의 대표가 베네수엘라 수도 까라카스에 모여 베네수엘라와의 연대 전략을 세웠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참여한 대표단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은 다양한 행동전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언론의 서사를 규정할 것, 베네수엘라 야당의 미국과의 관계와 폭력의 역사를 알리는 국제 캠페인 개시할 것, 미국 경제 제재에 대한 법적 캠페인 조직할 것 등이 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 시대에 우리의 (다른 세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제안이 나왔고 이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우리는 이를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수백만 베네수엘라 국민이 지난 18년간 – 특히 차베스 대통령 서거 후 지난 3년간은 더 심해진 - 공격을 견디며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혁명

¹⁴ Petrocaribe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 국가의 석유동맹

¹⁵ 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

¹⁶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D8J G5의 미국 자회사

¹⁷ Hurricane Irma

과정”이라며 꼬르데로 영사는 발언을 마무리했다. 10월 15일 주지사 선거를 통해 수백만 국민의 혁명 수호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선택은 국제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하를 받았다.

2018년에는 시장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치러지기 때문에 향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가 갈 길을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중요하다. 베네수엘라를 지킬 것인가 혹은 침묵하는 운동 진영으로, 혹은 걱정만 하는 개인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하는 선택이 인류와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수십 년 전 그레나다, 아이티, 온두라스와 같은 국가에서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 발생의 서막이 될 중요한 순간을 성공적으로 밝혀낼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제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또한 우리의 활동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성과와 앞으로 이를 성과를 고양하고 희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같이 한 걸음"

허울뿐인 '녹색혁명'이 아프리카를 '넘보다'

f맨위로

글: 알란 브러튼¹⁸

번역: 지민경, 예선희, 홍정희(번역팀, ISC)

* 본 기사는 그린레프트 위클리(Green Left Weekly)의 "Misnamed 'Green Revolution' eyes Africa" (<https://www.greenleft.org.au/content/misnamed-green-revolution-eyes-africa>)를 번역한 글입니다.



“녹색혁명”이라는 용어는 1960년대부터 주식으로 사용되는 작물, 특히 쌀과 밀의 다수확 품종을 제3세계 국가에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멕시코, 인도, 필리핀이 표적이었다. 녹색혁명의 명시적 목표는 식량 생산을 늘려 기아를 종식하고 혁명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 외의 암묵적 목표는 바로 농기업의 제3세계 국가 진출을 증대하는 것이었다. 이들 농기업의 사업적 성공에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품종의 종자, 비료, 살충제, 농기계의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녹색혁명은 농업의 생산량을 증가시켰으나, 기아와 빈곤을 감소시키고, 영양소 섭취를 개선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일부 실패에 대해서는 녹색혁명 옹호론자들도 인정했지만, 이들의 답은 “다른 대안이 없었다,”였고, 특히 아프리카와 같이 대체로 개발이 덜 된 국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대안이 없다.

인도

인도가 1947년 독립을 이룬 뒤에, 정부는 전쟁과 분열 그리고 식민주의에 의해 황폐해진 인도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장려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다양성, 자연 존중, 자립, 생태라는 인도의

¹⁸ Alan Broughton

전통적인 농업 개념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와 관련해 세운 비전은 인도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정확히 반대였다. 이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에 기반하여, 투입을 집약적으로 하고, 작물과 (비료나 농약 등에 대한) 의존성을 획일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주장하는 미국 전문가들은 인도의 정치인들에게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그들의 비전이 채택되었다.

녹색혁명을 선택한 모든 나라의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전에는 간작 작물, 윤작 작물, 가축과 짚을 쓰는 전통적인 수확방식이었음을 고려할 때, 수확량을 녹색혁명 이전과 비교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인도에서 농업 생산량은 녹색 혁명 이후보다 이전이 더 높았다. 또한 보리, 병아리콩 그리고 면과 같은 비 녹색혁명 작물의 생산량은 새로운 품종과 화학비료 없이도 증가했다.

생산량 대비 물이나 화학비료의 단위 사용량을 비교하였을 때 전통방식의 종자들은 화학비료와 관개시설을 사용하지 않고도 녹색혁명의 “고수확 품종”보다 더 높은 수확량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 종자는 가축의 사료가 되는 짚을 생산 했고, 지붕을 이는 재료로도 사용되었으며 토양을 위한 유기물로도 쓰였다.

펀자브¹⁹의 밀 수확량은 1970년대에 정점을 찍었다. 토양의 침식과 유기물의 토양 유실 때문이었다. 일정한 수확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화학비료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오직 큰 농장주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

1974년이 되자, 필리핀의 쌀 생산자들은 토양의 토질이 낮아지자 고수확 품종의 수확량이 감소함을 알게 되었다. 토질 악화와 환경의 황폐화가 (품종 개발 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녹색혁명 도입을 장려하고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녹색혁명(종자)에는 세계 농산품 가격의 100%에 이르는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사회적·영향

녹색혁명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다. 1970 년과 1990 년 사이에 세계 기아 인구가 9 억 4천 2백만에서 7 억 8천 6백만으로 16 % 감소했지만, 이러한 개선은 토지 재분배와 같은 사회 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중국(의 식량 문제 해결)의 성과이다.

중국인을 제외하면, 이 기간에 기아 인구는 실제로 11 % 증가했다. 1973 년과 1983 년 사이에 인도에서는 1 인당 칼로리 소비량이 2,266 칼로리에서 2,221 칼로리로 감소했다.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의 절반이 거주하는 국가가 바로 녹색혁명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인도였다.

인도에서 녹색혁명은 몇몇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빈부 격차를 증가 시켰다. 부농은 값싼 대출과 노동력, 관개 시설 접근에 더 용이했으며 보다 나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 년이 되자 부농의 부채도 늘어났다. 소농은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었고, 막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사채업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1993 년 ~ 2003 년에 10 만 명의 인도

¹⁹ Punjab

농민이 살충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 이후로 평균 30 분에 1 명꼴로 농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토양의 유기물 감소로 토양 비옥도도 부실해졌다. 그루터기와 퇴비가 줄고, 바이오매스를 많이 생산하는 (사료의 주원료인) 수수와 기장을 밀이 대체하게 되었다. 콩류가 윤작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자연적인 질소 고정 작용²⁰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료 또한 토양 산성도를 증가시켜 알루미늄 독성을 일으켰다.

새로운 품종은 해충, 질병 및 잡초에 더 취약하여 더 많은 양의 살충제와 제초제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쌀 생산을 위한 살충제 사용이 7 배나 증가했다.

고수확 품종은 3 배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농경지 물을 펌프 우물에서 공급받는 편자브에서는 해마다 지하수면이 30cm씩 감소하고 있다. 관개수로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지하수면의 상승으로 (지하수의 증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지하수가 증발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염류들이 토양 내에 지속적으로 집적되어) 토양 내에 염분이 쌓여 토양이 나트륨화 되고 침수가 잦아졌다.

유전적 획일성과 단작()이 토착 작물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였다. 수천 년 동안 농민이 관리해온 전통적 농법으로는 엄청난 수의 품종을 생산했는데 말이다.

녹색혁명 이전에는 최소 3,000 종의 벼가 필리핀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 년대에 이르러 대부분의 쌀 재배는 고수확 품종인 인디카종(IR8)에서 비롯된 5 가지 품종만이 생산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7,000 종의 쌀이 자취를 감췄다.

다양성의 상실은 안정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전통 품종은 일반적으로 더 향기롭고 해충과 질병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단단하고 최소한의 투입물만 필요했다.

새로운 밀 품종은 질병에 훨씬 더 취약했다. 이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3 ~ 5 년마다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해야 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민 수(인도 585,000 명, 멕시코 204,000 명, 필리핀 166,000 명)가 가장 많은 두 나라가 녹색혁명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 나라에는 생태학적 농법을 사용하지만 공식 "유기농" 인증을 받지 못한 농민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다'

녹색혁명 기업들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기업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아프리카로 눈길을 돌렸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은 농사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토종 종자를 가지고 있다.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기아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한다며, 이전에 녹색혁명을 선전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떠들어대고 있다.

록펠러재단²¹과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²² 등이 설립한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이 새로운

²⁰ 생물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질소를 흡수하여 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의 질소화합물로 바꾸는 작용

²¹ Rockefeller Foundation

녹색혁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몬산토를 비롯한 민간 부문 출신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게이트 재단은 몬산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

AGRA의 최우선순위는 유전자 변형이다. 지금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유전자 변형 연구의 기괴한 사례는 카로틴 함량을 높여 "실명을 예방" 하고자 유전자 변형 바나나를 개발에 1,500 만 달러를 지원한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퀸즐랜드 공과대학교²³의 제임스 데일²⁴은 오렌지색 바나나²⁵의 아수피나²⁶ 품종 유전자를 캐빈디시²⁷에 삽입하였다.

오렌지색 바나나는 이미 카로틴 함량이 높으며 유전자 변형이나 로열티 지불 없이도 전 세계 널리 재배되고 있다. 게이트와 데일이 진정으로 영양에 대해 걱정한다면 연구 대신 이 내용을 널리 알릴 것이다.

아프리카의 농업 문제가 심각하지만 녹색혁명이 해결하지는 못한다. 작물-축산-임업을 결합시킨 혼농임업, 멀칭(뿌리 덮개), 피복 작물 재배, 퇴비, 등고선 경작, 간작, 보존 경운²⁸, 생물 다양성, 더 나은 방목 관리를 사용하는 농법으로 대체될 수 있는 잘못된 농업 관행으로 토지가 황폐화된 것이 아프리카의 수확량 감소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용 중인 몇 가지 훌륭한 통합 농법 체계가 있다. 킬리만자로 산의 경사면에 있는 차가²⁹ 먹거리 숲과 우간다에서의 유사한 경험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1970년대 빌 모리슨³⁰과 데이비드 홀그렌³¹이 영속농업을 개발하는데 영감을 주었다.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화학 비료, 농약, 하이브리드 종자 및 유전자 변형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기업이 퍼뜨린 거짓 선전일 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 비료, "개량 종자," 또는 환경과 소비자 건강을 해치는 종자가 없이도 지속 가능한 높은 수확량을 거둔 수많은 사례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사용되는 농생태학 체계에 관한 많은 문헌이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조차도 생태농업이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하게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녹색혁명으로 기업 자본주의는 이전에 침투하지 못했던 곳의 농업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환경 및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었다.

이익은 주로 투입물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도용해왔다.

²²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²³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²⁴ James Dale

²⁵ Fe'i

²⁶ Asupina

²⁷ Cavendish

²⁸ 논밭을 갈면서 표면의 30% 이상을 작물의 잔재물로 덮는 경운 방법. 흙과 물의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²⁹ Chagga

³⁰ Bill Mollison

³¹ David Holmgren

이 녹색혁명 모델을 아프리카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이에 순응하는 정부가 아닌, 농민과 이들을 지지하는 조직의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저항은 녹색혁명이 처음으로 도입된 나라들과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산업화 된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변화의 물결" '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정말 미국에 불리할까3'

f맨위로

원종일(자문위원 강연 참가자)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저렴한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진영도 있지만 절반 인구가 넘는 한국인들이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특별한 동빈자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6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친구로 여기고 있고 북미 지도자의 강경 노선으로 군사적 긴장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들은 미국과의 유대 관계가 더 굳건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 정부는 현재 FTA는 미국 산업에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재협상을 하자고 강요했다. 불편하게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협정문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정도니 이전 협상을 정말 잘했나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10월 3일 국제전략센터에서 개최한 한신대 국제관계학과의 이해영 교수님과 함께한 한미FTA 영문 협상문 강독 모임을 가졌다. 단 2시간이었지만 많은 독소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와 같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 보다 더 큰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서 '미국 내에서와 같은'이란 문구로 인해 이 조항의 해석이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국내법이 한국의 국내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들은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다른 조항에서는 복지, 안보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 등의 자치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협정은 한국에게 불평등한 것이었다.

그런다면 트럼프는 뭐가 그리 불만일까? 국제 관계에서는 힘 있는 자가 더 자유로운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행사하고 싶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유롭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가 문을 열도록 미국은 마음 대로 한국을 강제하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아직 배가 고프는 것이다.

이해영 교수는 경제지표를 통해서 5년동안 한미 FTA는 한국에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중매체는 FTA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이론을 들어 FTA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협상하느냐와 또 당사자국이 동등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만약 한 당사국이 동등한 정치적 힘이 없다면 당사국들의 국민들이 대신 목소리를 내 더욱 공정한 협상을 이뤄내거나 전면적으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나 또한 이 협정문을 읽기 전까진 무지하였고 이제 진실이 알게되었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공정한 협정마저도 더 불공정하게 될 위기가 다가 온다.

더 자세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뜬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뉴스'

프랑스Q하원을 통과한 대() 테러 법안

f맨위로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몽드(Le Monde)의 “ Les députés adoptent définitivement le projet de loi antiterroriste (http://www.lemonde.fr/police-justice/article/2017/10/11/les-deputes-adoptent-definitivement-le-projet-de-loi-antiterroriste_5199579_1653578.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



대() 테러 법안은 %월 %일로 종료 시한이 예정된 국가비상사태를 끝내기 위한 준비이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 테러 법안은 10월 18일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사회당이 기권한 가운데 244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했고 주로 공산당 소속인 2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10월 11일 수요일 하원을 통과한 ‘국내 안전과 대() 테러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실시된 특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월 9일, 정당 대표로 구성된 상원합동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에 동의한 상원의원은 10월 18일 대() 테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이후 신속하게 공포될 것이다.

제라르 콜롱³² 내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으로 2015년 11월 13일의 테러 공격³³이 발생한 날 저녁 이후로 시행 중인 특별 예외 조치들이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면서 11월 1일로 종료 예정된 국가비상사태는 끝난다.

여러 인권 단체는 대() 테러 법안이 공적 자유를 후퇴시키고, 행정부 권력을 강화시켜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한다. 반대로, 우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경계를 완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면, 도지사나 대통령은 신규 법에 따라 '테러의 위협에 노출된 장소나 상황에서' 보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개인의 가방과 차량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폭력과 증오, 차별을 조장하고, 테러를 위한 모임이나 테러를 예찬하는' 사상을 확산시키는 종교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정부가 언제든지 가택연금이나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이나 구금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허가로 정부는 '방문과 압수(가택수색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집행할 수 있다.

사법부의 적법절차 없이도 위협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택연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거주구역이 정해진 사람은 전자 팔찌착용을 해야만 시()-도() 간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의심되는 사람에게 개인 전화번호와 전자 통신 수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고할 의무를 법안에 추가하고자 했지만 제라르 라르셰³⁴ 상원 의장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상.하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10월 9일 열린 상원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상원의원은 그 외에도 가택수색과 가택연금 및 거주지 제한에 관한 조항에 4년 후에는 무효가 되는 '자기파괴 구절'을 넣었다. 하원의원은 이 기한을 3년으로 수정했고, 상원합동위원회에서는 더 나아가 국가비상사태로 만들어진 모든 조치에 이 구절을 넣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이어진 의회의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상.하원 의원은 정부가 대() 테러 법안을 실제로 적용할 때 보고를 받는다.

대() 테러 법안은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준비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전파를 통한 의사소통을 감시하고 국경과 같은 곳에서 신원 확인을 강화해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구역을 확대한다.

³² Gérard Collomb

³³ 2015년 11월 7일 자행된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에 이어, 2015년 11월 13일 파리 시내에서 발생한 대형 테러. 총 7곳에서 동시에 테러와 인질극이 발생하였는데, 무차별 총격과 자살폭탄 테러로 가해자 7명 이외에도 131명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이 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국가비상사태는 6차례 연장되며 2년간 계속되었다.

³⁴ Gérard Larcher

실제로 이 법은 공항처럼 국경을 넘기 위해 다니는 장소의 반경 10km까지의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다. 처음에는 20km였지만 대부분의 주요 도시의 주거 밀집 지역 내에서 통제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상원합동위원회에서 수정했다.

일본Q 사상 첫 '연승으로' 아베 총리가 던진 '대담한 다음 한 수를' 아는가? '인재 이동'이라는 말의 의미심장함

f맨위로

번역: 이로미 (국제팀, ISC)

* 본 기사는 겐다이 비즈니스()의 “ 3 ”
 (<http://gendai.ismedia.jp/articles/-/53335?page=2>)를 번역한 글입니다.



(출처: SBS 뉴스)

전후 선거 사상 유일한 '연승'

10월 22일 일본에서 실시된 제48회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³⁵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못 의기양양했다. 전후 자민당 역사에서 3회 연속으로 중의원 과반수를 차지한 총리는 아베 총리가 유일하다.

'55년 체제³⁶' 확립 이후로 보면 이케다 하야토³⁷ 총리와 사토 에이사쿠³⁸ 총리 두 명만이 연속 과반수를 쟁취했다.

전후에는 1949년 1월 제24회 중의원 선거에서 요시다 시게루³⁹ 총리가 과반수를 획득했다.

³⁵

³⁶ 1955년 일본 정계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1993년까지 38년간 지속된 양당체제를 말한다.

³⁷

³⁸

³⁹

최근에는 장기 집권의 대명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⁴⁰ 총리의 1986년 6월 ‘죽은 척 해산⁴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⁴² 총리의 2005년 8월 ‘우정() 해산⁴³’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두 총리는 2회 연속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민당 압승은 전후 선거 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아베 총리가 우쭐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는 전부 아베 총리 덕이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희망의 당 고이케 유리코⁴⁴ 대표(도쿄도지사)의 ‘자폭 테러’라고 해도 좋은 9월 29일 진보계 공천 여부에 대한 ‘추호도 없다’, ‘배제하겠다’는 실언으로 초래된 결과다.

달변가·고이케 대표가 왜3

고이케 유리코는 1993년 일본신당으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비자민계 연립정부의 호소카와⁴⁵ 총리 측근으로 시작하여 오자와 이치로⁴⁶ 신생당 대표간사(당시) 주도로 결성된 신진당에 참가, 이후 자유당과 자민당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 총리 보좌관, 환경장관에 오를 때까지 늘 시대의 최고 권력자 옆에서 ‘정권 홍보 책임자’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한 정치 경력을 가진 고이케는 정치가의 말이 지니는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다. ‘쿨 비즈’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중을 사로잡는 언어구사로 화제를 독점해 온 그녀가 왜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파리에서 귀국한 후, 희망의 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제 언동으로 동지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수습하려 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다.

희망의 당과 민진당 합류를 놓고 고이케 씨는 자신의 정치 신념에 비추어 민진당 리버럴계 중의원 의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이다.

말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때는 정권 선택 선거인 이번 중의원선거에서 ‘아베 1강정치’를 타파하자고 거듭 제기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고이케는 국정에 복귀해서 정권 획득을 모색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구체화해나가는 ‘아베’ 총리의 ‘다음’ 한 ‘수익’ 내용

이제 문제는 아베 총리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은 확정적이다. 벌써부터 헌법개정과 경기부양책 선언을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40

41 중의원 본회의도 열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강행한 의회 해산

42

43 우체국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의회 해산

44

45

46

흥미로운 점은 26일 관저에서 열린 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 아베 총리) 소식을 보도한 니혼케이자이신문⁴⁷>(27일자 조간) 기사이다.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은 기업을 향한 사회적 요구다. 3% 임금 인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분배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성과 중시의 근무 형태로 변해가는 와중에 일률적인 수치 목표는 이치에 맞지 않다. 성장 산업으로 인재가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요컨대 업무 형태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건 임금 인상과 해고는 표리 관계에 있다.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 중반, 춘계임금협상 시기에 맞추어 ‘고비용 인상’ 제도를 도입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 엔저 현상 아래 더욱 힘 있게 ‘경기 침체 탈피’ 선언을 주창하고, 통상국회 중반에 헌법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도모하여 총리 선거에서 무투표 3선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리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아베’를 넘보는 자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 '국제전략센터는 '연대와' 변화를' 통해' 대안사회를' 지향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센터의' 자문위원을' 비롯해' 월간국제동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들입니다"' ▲

자문위원

남문희(시시안 한반도 전문기자)
신순애(탁틴내일 상담가)
이정철(송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충각(노동운동 활동가)
이해영(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선임활동가/대표)
조순덕(민가협 상임의장)
존스캣(Reciprocity)
차미경(기록학 연구가)
허석렬(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해외통신원

로날드 콜린스(활동가, 미국)
래리 로젠버그(환경활동가, 미국)
메르시-리아리나스 앙헬레스(평화여성파트너, 필리핀)
자넷 찰스(평화의 증인, 미국)
까뜨리나 사문(그레인, 인도네시아)
마띠아스 바예호스(프렌데 암블리오, 칠레)

편집장. 심태은

교열팀. 가빈 후양, 릴리안 헉스터

번역팀. 예선희, 지민경, 홍정희

국제팀. 이로미, 정성미